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대미 정책 전망

전 현 준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북한과의 대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민주당 오바마 후보가 제44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북한은 한시름 놓게 되었다. 최소한 당장은 미국의 대북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늘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자신의 대외 정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대북 압박 정책을 쓰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북한도 '맞대응(tit for tat)' 차원에서 강경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인한 북한의 강경대응 사례가 바로 제1, 2차 핵위기였다.

미국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제국주의자'라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력사용도 불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북한도 미국의 군사공격을 받을지 모른다는 것이 북한의 우려이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에서 보수정권이 들어설 경우 안보불안을 더욱 심하게 느낀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시절부터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주장했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핵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의제들을 대화를 통해 풀어갈 것이라는 기대를 북한은 갖고 있다. 비록 오바마 행정부가 북·미간 대화를 강조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북 정책이 나올 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은 철저히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보아가면서 그에 상응한 대미정책을 구사해 갈 것이다. 북한의 입장은 '대화에는 대화, 무력에는 무력'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꾸준히 준수되어 왔다. 특히 이것은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북핵위기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미국 민주당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베트남 전쟁을 본격화했고, 클린턴 행정부 시기인 1994년에는 무력으로 북한 핵시설을 공격하려 한 정당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서도 큰 '환상'을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오바마 행정부도 '미국 패권주의'를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부시 행정부의 그것과 큰 차이는 없다는 인식이다.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고는 있지만 그 대전제가 '비핵화'이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와는 대화도 쉽지 않을 것이라 것이 북한의 판단이다.

아울러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이 소수자 또는 비주류 출신이기 때문에 모든 국내의 정책을 소신껏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북한은 북핵문제를 비롯한 '북한문제'도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미국 보수층의 노선에 따른 접근방안이 나올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오바마 당선 이후에도 북한은 당선사실만 보도한 채 이렇다 할 논평을 내지 않고 있다. 미국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의도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인 이근이 미국을 방문하여 11월 7일 뉴욕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 진영의 한반도정책팀장 프랭크 자누지와 현 부시 행정부의 성 김 국무부 북핵 특사를 만났다. 6자회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안을 논의했을

것인데도 북한은 구체적인 사실을 함구하고 있다.

솔직히 단기간 내에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밝혀지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2009년 6월 정도까지는 북·미관계가 소강상태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는 북·미직접대화를 통해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6자회담들을 벗어나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일본이 북한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을 더욱 기피하려 할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이 강력히 6자회담들을 고집한다면 북한도 굳이 이를 피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6자회담들 내에서의 북·미간 양자회담을 집요하게 달성하려 할 것이다.

만일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방법으로서 진정으로 ‘행동 대 행동 원칙(action for action)’을 지킨다면 북한도 그에 상응하여 핵폐기 수순을 밟아 갈 것이다. 물론 미국은 북한에게 북·미 수교를 포함한 많은 선물을 주어야 할 것이다. 다만 북한은 철저히 오바마 행정부의 진정성을 검증하면서 핵폐기 수순을 밟아 갈 것이다. 따라서 완전 핵폐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미국의 대북 정책 여하에 따라서는 ‘제2의 핵실험’ 등을 포함한 또 다른 긴장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도 경제난 해결, 후계자 문제 해결 등 많은 난제를 안고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의 안전보장을 받아내는 것이 필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대미 관계를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하루빨리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남북간 체제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으로부터 안보위협까지 받고 있는 북한이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개혁·개방을 무조건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이끄는 방법은 미국이 북한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는 것 외에는 별 대안이 없다. 전례로 보아 북한 개방의 속도는 주변국들 특히 미국의 북한개방화 정책과 비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북한의 핵폐기 및 개혁·개방 문제도 미국의 대북 정책 종류와 맞물려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